

與, 대법원 대선개입 현장검증 시도…野 “국감 보이콧 검토”

국정감사 3일차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전산로그 기록 등 관련 현장검증
천대엽 처장과 1시간 가량 면담

野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어
대법원 대한 사실상 압수수색”

국정감사를 위해 대법원을 찾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의 지난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들여보기 위해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업포이자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추미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먼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과 관련해 현장검증한 후 질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 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



추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듣자고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여당 의원들과 이석했다.

이후 추 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대법원 6층에 마련된 처장실에서 천 처장과 1시간 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현장검증 시도에 동행하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

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현장검증을 두고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 형식도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여당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그 목적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직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가 나올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하고 망신주고 인민재판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자리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조작 녹취와 저질 합성 사진으로 온갖 악마화, 회화화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 법치주의를 사유화하기 위한 교활한 사법 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로 유

죄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4월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를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판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일정이 추가된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AI(인공지능)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 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1인당 75명 규모의 집무실이 필요하고 대법관 증원 14명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적절성을 현장 검증에서 밝혀내겠다고 버틴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반도체특별법 처리지연… ‘주 52시간 적용 예외’ 논쟁 재점화

與野 논의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
野 “근로기준법 자체서 예외 뒤야”
국감 이후 본회의서 합의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진국이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

원의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에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지는 내용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쟁점에서 떨어졌고, 이후 쟁점은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종사자의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로 좁혀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

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약 4000명, SK하이닉스는 380명이 이미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사고,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종전 회당 3개월에서 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로 주52시간 적용 예외 관련한 쟁점

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면 법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동층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했고, 이후 180일 동안 여야 논의 단 한 차

례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에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관계를 고려해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이진숙 해임·체포’ ‘플랫폼 규제’ 이슈 화두

(전 방통위원장)

방미통위 첫 국정감사

野, ‘이 전 위원장 체포’ 부당성 주장
넷플릭스·인앱결제·카카오 도마 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10월 1일) 후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야는 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의 해임·체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동시에 넷플릭스의 ‘동의 없는 시청 불가’ 요금 인상 관행,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과징금 지연, 카카오 택시 업데이트 불법 불가 논란 등 플랫폼 규제 이슈가 국감장을 뒤덮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민간인 신분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공개숙청이자 공포정치”로 규정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박종권·최수진 의원). 이 전 위원장도 “이 정부는 비상식이 뉴노멀”이라고 응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언권을 최소화하며 “체포영장에 따른 절차였을 뿐이며, 사실과 다른 답변 반복 시 위증을 물어야 한다”(김현 의원)고 맞섰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 간 사적 문자 공개를 둘러싼 욕설과 고성이가 오가며 정화가 두 차

례 반복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

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상임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감사가 진행된 점도 쟁점이었다.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권한 없는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국감은 참담하다”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방심위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 비용 4억3000만 원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방통위가 언론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황정아·이훈기 의원)며 방미통위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김현 의원은 “법에 따라 직무대행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앱에서 ‘요금 인

상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하게 해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실태점검(‘24.1) 후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의견수렴 중이며, 내부 보고서에는 ▲동의 요구를 수반한 이용 제한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내 차별 ▲광고형 요금제 제한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교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사전 고지와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며 위법성에 선을 그었다.

정무위·과방위에서는 동시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대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의 금지 취지를 한국도 존중해야 한다”며 구글의

외부결제 26% 수수료를 ‘법 취지 무력화’로 비판했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사업자 의견 청취·법률 검토로 지연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률전문가 이승근 변호사는 “방미통위 보고서상 플랫폼의 부당행위와 국내 사업자 피해가 확인된다”며 추가 입법을 주문했다.

카카오의 우영규 부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피드형 친구탭’ 전환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은 어렵다”며 “올해 4분기 내 친구 목록 중심으로 개선되되 2.0을 2.1로 고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슛폼 노출 우려에는 “14세 미만은 행태정보 미수집, 15세 이상은 비식별 정보만 활용하며 권고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서현 기자 seoh@